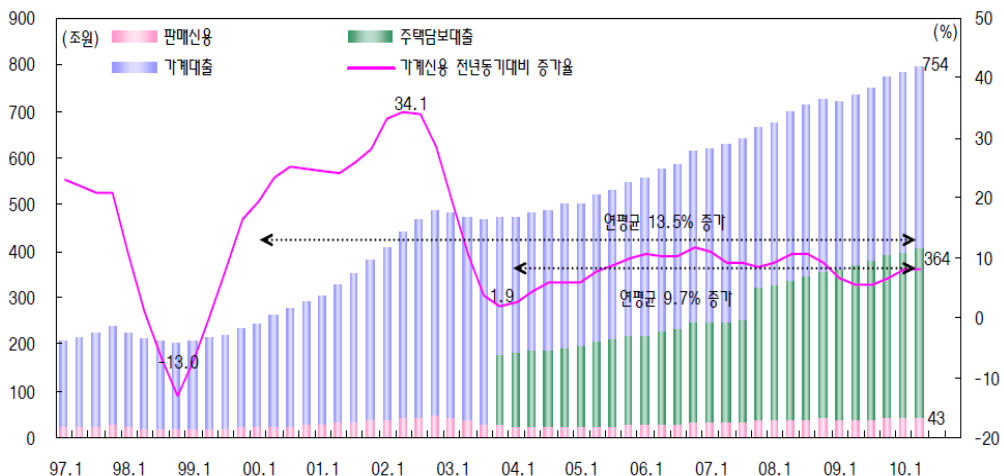


가계부채에 관한 토론

윤 종 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가계신용 규모 또는 자금순환표상의 개인금융부채로 측정되는데, 2010년 6월말 현재 가계신용은 755조원, 개인금융부채는 878조원입니다. 개인금융부채는 가계신용과 달리 판매신용이 제외되나, 순수가계 이외 소규모 개인기업과 비영리법인 대출을 포함하며, 종금사, 증권사, 대부업자 대출을 포함하여 규모가 더 큼니다. 가계신용의 내역을 살펴보면 가계대출이 712조원으로 94.3%를 차지하고 있으며, 판매신용이 43조원으로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364조원으로 가계대출의 5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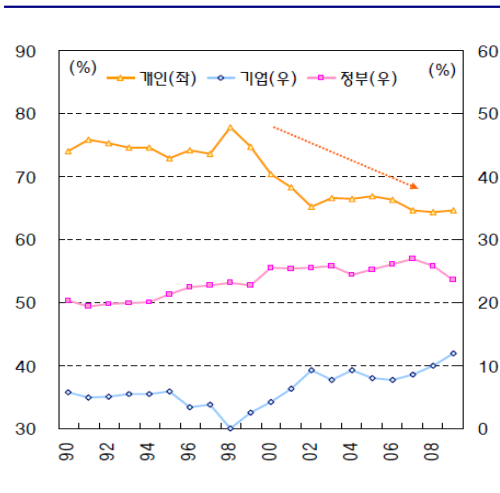


* 주택담보대출 (금감원 기준) : 은행 '04년 조사 시작, 비은행 '08년 조사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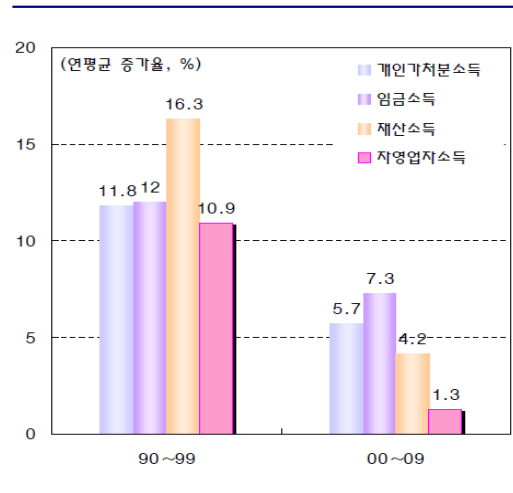
가계부채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3.5% 증가하였으며, 카드사태가 진정된 2004년 이후에도 연평균 9.7%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상 GDP 증가율(6.8%)과 가처분소득 증가율(5.6%)을 상회한 결과,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0년 49%에서 2009년 81%로 32%p 상승하였으며,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0년 81%에서 2009년 143%로 62%p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은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난 점도 있으나 개인가처분소득이 더디게 증가한 점에도 기인합니다.

지난 10년간 개인가처분소득 증가율이 낮았던 것은 그동안 자영업자 소득 증가율이 저조하여 개인부분의 소득 증가율이 기업부분과 정부부분을 포함한 국가 전체의 소득 증가보다 더 낮았기 때문입니다.

가처분소득 부문별 비중



개인 가처분소득 원천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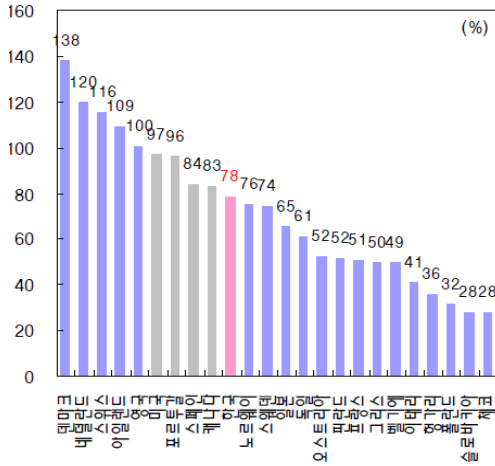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OECD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더욱 크게 상승한 결과 가처분소득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2008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미국, 스페인, 캐나다보다 낮으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높은 수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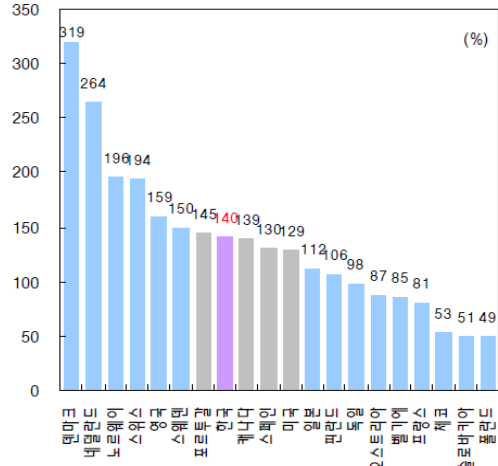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우리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영국, 스페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금융부실에 따른 급격한 신용경색으로 가계부채가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양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권시장 안정자금, 은행 자본확충펀드 등을 통해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

으로 대응한 결과 신용경색이 발생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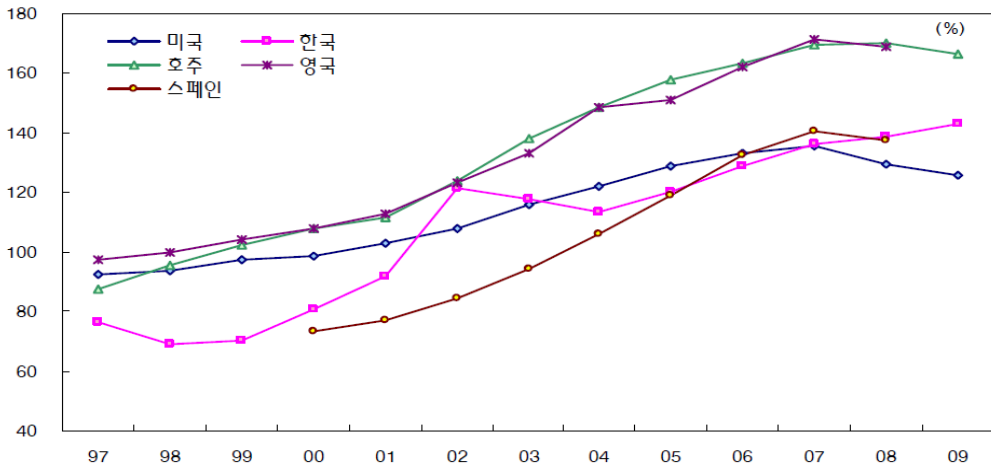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08)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08)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가계부채 수준은 높은 편이나 가계 상환능력, 가계대출 건전성, 금융기관 충격흡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현 수준에서 가계부채가 관리가능하다고 봅니다. 가계부채는 소득 및 자산 보유수준이 높은 3~5분위 계층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고 가계 소득 증가율이 지속 상승하고

있어 상환능력이 양호한 상황입니다. 가계대출 연체율 0.6%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LTV 비율이 50%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며, 은행의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30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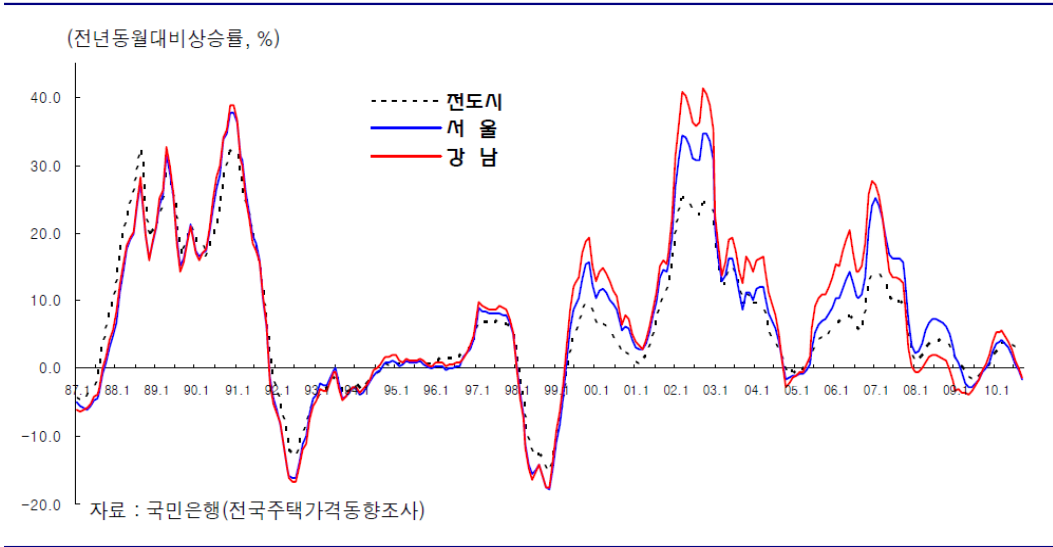
그러나 가계대출 구조를 보면 단기·일시상환형·변동금리 중심으로 이루어져 금리상승, 주택 시장 여건 악화 등 경제여건 급변 시 부실이 확대될 위험이 잠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저소득 층의 경우 금융자산 및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높아 상환능력이 취약하여 소득감소, 금리상승 등 거시경제 충격 발생시 상환부담 증가로 부실 가능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난 것은 2000~2007년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데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 향방에 따라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으나, 그러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주택의 대종을 차지하는 아파트 가격의 장기추이를 보면 최근의 주택가격 움직임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하여 주택가격이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주택가격은 주택의 수급에 의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가격의 방향성에 대해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2~3년의 짧은 기간동안만이라도 주택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주택가격은 공급부족으로 인해 크게 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인구구조나 가구구성의 변화에 따라, 예를 들어 중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중대형 수요는 감소하는 등 수요에 있어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 또 이에 맞추어 민간의 주택공급이 시장에서 조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지속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역별 아파트가격 추이



정부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소득기반 확충, 가계부채 확대 유인 감소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완만하게 감속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조하여 가계부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를 통해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위험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적 취약성 완화를 위해 장기·고정금리 상품인 보금자리론을 활성화하고 시중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활성화를 지속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저금리 전환대출(환승론),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가계대출의 증가속도와 취약요인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거시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